

## 쌍용차 해고자, 모두 공장으로 돌아간다

### 14일, 해고자 119명 2019년 상반기까지 복직 합의... 국가폭력 사과, 손해가압류 철회 등 청산 과제 남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 조합원들이 전원 복직한다.

노조 쌍용차지부와 사측은 9월 14일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해고자 60%는 2018년 말까지 복직하고, 40%는 2019년 상반기까지 복직을 완료한다.



은 공장으로 돌아가도 연대의 힘을 잊지 않고 사회약자와 연대해 투쟁하자고 결의했다"라며 해고 조합원들을 대표해 소감과 결의를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복직 합의를 했지만 고 김주중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은 9월 13일 대한문 분향소를 찾아 서른 분의 희생자 앞에 조문하고, "2015년 노사 합의에도 다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부터 사측과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했다.

지부는 13일 밤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해고자 60% 2018년까지 채용, 40%는 2019년 상반기까지 단계 채용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 못 받는 복직자는 6개월간 무급휴직 전환 후 부서배치 완료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정리해고 관련 일체의 집회나 농성 중단과 민형사상 이의 제기 중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 부담 지원과 경영정상화 지원 방안 마련 ▲경사노위는 해고자 복직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추가지

원 방안 마련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승인했다.

쌍용자동차지부와 사측은 9월 14일 오전 10시 '해고자 복직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부는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해고자 복직 합의에 관한 쌍용차지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고 조합원들과 쌍용차범대위 등 연대 노동자, 시민들은 '쌍용차 참사' 희생자 서른 분을 의미하는 작은 화분 30개를 들었다.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투쟁을 끝내고 다른 투쟁을 준비하는 마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득중 지부장은 "최고의 합의는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투쟁한 최선의 결과다. 조합원들

는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지시로 조현오가 진두지휘한 살인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가압류는 조합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쌍용차 해고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전원복직이라는 오늘을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이였다"라고 인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불법 파견과 정리해고,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고 모두 승리해 금속노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라고 결의를 밝혔다.

쌍용차지부 해고 조합원들과 쌍용차범대위 참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희생자 서른 분을 상징하는 꽃 화분과 해고자 복직 합의서를 희생자 영정 앞에 바쳤다.

# 한국지엠, 정부지원금 꿀꺽·정리해고 계속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 불법 파견·고용불안·시간 끌기 삼중고... 인천지법 불과 선고 돌연 연기

한국지엠이 일자리 보장을 전제로 공적자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기도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3년 6개월을 기다려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일주일 남기고 무기한 연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지회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파견 선고 지연 규탄 기자회견’과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목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들과 범국민대책위는 ▲불법 파견 즉각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 고용 ▲노동부·법원 재판 시간 끌기 중단과 엄정하고 신속한 이행명령, 판결 ▲한국지엠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과 조치 ▲한국지엠에 대한 철저한 정부 관리·감독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엠 자본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부평 1공장을 1교대로 전환했다. 내년에 창원공장도 1교대로 전환한다고 한다. 지



엠 자본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구조조정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선고를 연기하며 한국지엠 자본에 법을 어길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한국지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다.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은 이미 해고됐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창원과 부평, 군산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2015년 인천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다. 이듬해 2016년 창원 공장 비지회 조합원 108명도 인천지법에 같은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 부평과 군산공장 조합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창원 공장 조합원들에 대한 선고를 9월 13일로

예정했지만, 선고 일주일을 남기고 9월 7일 돌연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2016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낸 소송과 병합하겠다는 이유를 댔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벌인 ‘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목인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금속노조 조합원 5천여 명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까지 치면 해고자 숫자는 엄청나다”라고 개탄했다.

이완규 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장은 “지엠은 그동안 불법 파견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정부 지원금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4천억 원을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원했다. 불법 파견과 부당 정리해고를 계속하는 지엠에 나머지 4천억 원은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마친 뒤 ‘불법 파견 중단, 구조조정 저지, 총고용 사수’라고 적은 대형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 “ILO 노조 할 권리 협약 비준, 더 늦추면 안 돼”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법 개정 촉구... “자본가 노조 파괴 도구 창구단일화 제도 당장 폐지”

민주노총이 9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약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다. 더 지체해선 안 된다”라며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어 단결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핵심 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 29호 강제

근로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 등의 비준을 약속했지만, ILO 가입 후 27년이 지나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